

광주·전남 사전투표 열기... 최종 투표율 90% 넘을까

사전투표율 50%대 '전국 최고' '민주주의 위기 의식' 반영될 듯 혁신당 지지 표심 향방 등 관심 "민주, 호남 득표율에 응답해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광주·전남이 3일 본투표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인식 속에,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한 헌정 수호'라는 역사적 책임감을 발휘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제시한 투·득표율 90%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

사다. 2일 지역 정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5월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남은 56.50%, 광주는 52.12%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인 34.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은 전국 1위, 광주는 3위를 기록했다. 앞서 민주당 시·도 선대위는 지난달 13일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자 광주·전남의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9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가용 인력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만큼 90% 득표율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당시 광주·전남 사전투표율은 각각 33.67%, 34.04%였으며 최종 투표율은 82%, 78.8%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77.23%를 상회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광주에서 61.14%, 전남에서 59.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득표율 90%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광주·전남보다 대구·울산·부산 등 영남권 보수층 공약에 집중하면서 호남을 또다시 '이미 잡은 물고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구도 아래 호남 표심을 당연시해 왔다는 지역 사회의 누적된 불만도

여전히 뿌리가 깊은 만큼 90%대의 높은 투·득표율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4월27일 "이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혁신당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임을 선언한다"며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진보 유권자 표심이 민주당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혁신당 지지층 중 일부가 기존 민주당 주류와는 결이 다른 급진 개혁 성향을 띠고 있어, 민주노동당 등으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은 오랜 시간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이라는 당내 인식에 대한 반감과 선거 이후 반복된 지역 소외로 당에 대한 피로와 실망감이 누적돼 있는 상태"라며 "매번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해온 호남에 민주당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혁신당의 손을 들어준 담양군수 재선거만 해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서 90%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한다 해도, 이를 단순한 지지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압도적인 득표는 곧 지지 이상의 정치적 경고이자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이 호남의 대선 결과에 대한 무게감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 단체장들 투표율 달성 이색 공약 '눈길'

강기정 시장 "92.5%면 파란색 염색" 김병내 청장 "자치구 1위시 셔플댄스" 문인 청장 "주민들 원하는 공약 실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광주지역 단체장들이 역대급 투표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머리 염색부터 셔플댄스, 주민이 원하는 공약 이행까지 다양한 이색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선거 중립 의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투표율 올리기'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지역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92.4%를 넘어 92.5%를 기록할 경우,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강 시장은 지난달 2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투표율 92.5%를 넘기면 파란 머리로 변신해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자치구 단체장들도 투표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예고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구가 광주 자치구 중 최

다 득표율 기록하면 셔플댄스를 추겠다"고 공약했다. 김 청장은 "광주 남구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 다시 한번 셔플댄스로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며 "남구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 남구청사 앞에 개통한 푸른길브릿지를 홍보하는 영상에 직접 출연해 남구청사 내부 북카페와 푸른길브릿지 등에서 '셔플댄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구지역 투표율이 광주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면 주민들이 선정한 공약을 직접 실천하겠다고 약

속했다. 북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공약 후보는 △북구 물놀이장 개장식에서 물풍선 맞기 △북구민의 날 가을밤 음악회에서 가수 장민호 노래 부르기 △6월 열린만남의 날에 '부끄부끄' 인형탈 착용 후 참석 △6월 21일 하지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퍼포먼스 등 총 4개다. 이 중 하나는 온라인 주민 투표로 결정되며, 투표율 1위를 달성할 경우 문 청장이 직접 이행하게 된다. 광주는 그간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해 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은 81.5%로, 전국 평균(77.2%)을 훌쩍 넘는 수치였다. 지난 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52.12%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정성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6월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이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SNS 갈무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대시민 호소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민주 소속 광주·전남 단체장들, 지역민 투표 독려

광주시·교육청·자치구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해 본투표 참여를" 김영록 지사 '1인 캠페인' 전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자치단체장과 광주시교육감이 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투표 독려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를 마친 시민은 주변에

투표를 독려하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본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최근 확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12·3계엄 논란 이후 가장 큰 후과는 사회를들로 가르는 극단적 편 가르기와 끝날 줄 모르는 음모론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깨끗한 승복과 선거관리위원회

의 철저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며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본투표 당일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안정적인 투개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시민들의 힘이라면,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던 92.4%를 넘어 92.5%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늘 그랬듯 광주는 이번에도 투표하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힘을 보여주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전남 여수시 신동아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캠페인을 했다. 정성아 기자

선관위 당선 선언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

당선인 결정안 내일 오전 7~9시 의결 국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자동 이양 취임식 행사, 선서 위주 간소화 전망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대통령 취임 행사가 대선 다음날인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권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인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권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개표가 탈 없이 빨리 진행된다면 오전 7시에도 가능하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러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이번처럼 대통령직 권위로 인해 치러졌던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엔 문 전 대통령 당선인 의결 직후 민주당 안규백 당시 사무총장이 당선증을 수령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김선욱 기자